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장 추천 불발에 與 ‘법 개정 강행’ 예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野 반대·지연 개선여지 없어보여 25일 법사위서 병합심사 할 것 비토권 포함 정기국회 마무리”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야 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3차례 결친 회의에도 성과 없이 종료된 데 대해 야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된 이유로 “야당 측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 일동은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 위문을 달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 비토권 무력화하려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어 “야당의 일말의 양식,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 뿐”이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 지났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에게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며 중재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같은 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기공

산업부, 145억 투입 2023년 건립

안전보호 제품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527억 달러에서 2025년 925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고품질 제품과 중국 기업 등이 생산하는 범용제품으로 양분돼있다.

안전복이나 보호 장갑 등 인간의 안전보호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이 세워진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술이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해 고품질 안전보호 제품을 개발·생산하면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전북 익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센터는 산업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145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건립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APEG·G20서 ‘필수인력 원활한 이동’ 강조

文 대통령, 3일간 국제회의 참석 K-방역과 경제의 조화 등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K-방역과 경제의 조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노력을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1~22일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필수적 인력 이동 원활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이 개방적인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수출 확대 ▲세계적인 공급망 유지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제안으로 필수적 인력 이동 원활화 관련 문구가 정상선언문에 포함됐다. 이번 11월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는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문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지막

합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틀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방역 경험, 그린 및 디지털 정책이 골자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세계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APEC, G20 정상회의에서 ‘기업인 인력 이동’을 강조하는 것은 개방성을 유지하고 방역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제안하는 필수적 인력 이동 원활화가 이번 G20과 APEC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채택돼 앞으로 우리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리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이혜훈, 서울시장 보궐 레이스 ‘출사표’

부동산 관련대책 주요공약 내세워 “집값·일자리에 밀려 脫서울 없게 내집마련 도와 집걱정 털어줄 것”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 지역 현안인 ‘부동산’ 관련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19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은 경제시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경제통 이혜훈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전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용 디딤돌처럼 인식돼 서울시장은 자기 브랜드 만들기라 집권 기반 다지기에 치중하느라 제1순위로 챙겨야 할 서울시민의 삶은 뒷전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올라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구 1000만 선이 무너졌는데도 대권주자 시장은 재생과 보존이라는 자기 브랜드만 고집하며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서울시민들 니즈에 맞는 새집 공급을 사실상 가로막음으로써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폭등을 초래했

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대권 시장이 공범인 셈”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권주자 시장이 자기브랜드 만드느라 서울시민의 삶을 핑계치는 정치서울, 그 정치서울을 끝낼 경제시장이 필요하다. 집값이 비싸서,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없는 서울을 만들 경제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의원은 “집 걱정부터 털어드리겠다.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의 내 집 마련부터 돕겠다”며 ▲신혼·육아부부에 대한 지원적립형 분양제 도입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뿔개화’로 한강변과 연결한 가칭 ‘허니스카이(HoneySky)’ 공급 ▲강북, 강서 등 4개 권역 내 80층 규모 일체형 초고층 공간 가칭 ‘서울블라썸’ 건축 ▲공공·민간 공급 등 투트랙을 통한 주거 공급물량 확대 등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청춘프리패스”를 도입해 19~30세 청년들의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 더 넓은 세상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이동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혜훈은 강북과 강남을 두루 꿰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중에 강북과 강남을 모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세미나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정책 공약 구상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두 지역구로 경험한 정치인은 이혜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전 의원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것과 관련 “과도기 업무를 맡고 있는 시장권대행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각종 매입 임대사업 등 신규사업과 조치는 일절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19일 현재 야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인물은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과 이 전 의원뿐이다. 이후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는 25일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예측성 높인다

무역위, 관련규정 개정 오늘 시행 조사신청서 보완기간 30일 이내 확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신청서 보완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역위원회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10일 이내로 규

정한 조사신청서 보완 기간이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길어진다.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이다.

또 의견 청취,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조사 절차상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해 제도 이용자들이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

문가 감정 실시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조사 과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명문화해 조사 당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